

# 전주매일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음 3월 10일) 제20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주 도시개발계획 재정비

### 시, 2020년 10월까지 지역 전체면적 206km<sup>2</sup> 공간범위로 2030년 목표... 원도심 역사문화자원 활용 계획 수립 등

전주시가 10년 앞을 내다본 도시개발 청사진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2020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주시 전체면적(206km<sup>2</sup>)을 공간범위로, 오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 매 5년마다 추진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로 예측되는 전북권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주시 도시정책 방향과 도시공간구조의 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천년을 이어온 찬란한 문

화를 토대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 도약하려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실현 방향과 도시발전의 기본 틀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수립중인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수용해 품격 있는 사람중심의 도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도시 등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은 정비하게 된다.

또한, △교통환경개선 △보행자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공원 및 녹지 확보 등 시민들이 살기 좋은 생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 집행된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해제로 인한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생활불편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이상 전주시민들을 먹여 살린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주변 시가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전주시를 천년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한은 물론, 원 도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주만의 독창적인 세계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전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사실상 확정되자 2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문동신 시장, 박정희 시의회 의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임·단협 잠정 합의문에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가 빠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군산공장 폐쇄 사실상 확정... 지역사회 '눈물만'

### 문동신 시장 등 "임단협 잠정 합의에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빠져 한국지엠-정부,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군산공장 재가동 추진해야"

한국지엠 노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며 결국 시한을 넘겨 23일 오후 임·단협 잠정합의를 발표했다.

<본보 4월 24일자 1면>

이처럼 군산공장 폐쇄가 사실상 확정되자 지역사회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며 아픈 심정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내 기관 및 단체들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가 빠진 것에 대해 공정의 조속한 매각 추진을 통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4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문동신 시장, 박정희 의장, 김동수 회장은 "임·단협 잠정 합의문에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가 빠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

국지엠이 법정관리라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노조와 정부를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략적 전술로 군산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절망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한국지엠과 정부는 매각의사를 분명히 해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군산공장 재가동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지엠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시민들이 보여준 노력에 하루빨리 매각을 서둘러야 하고 정부는 나라으로 떨어

져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희미해 되지 않도록 분명한 해답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과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자신의 아픈인 것처럼 괴로워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 한국지엠의 발표에 대해 시민 A씨는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외면한 채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기업 윤리라면 그 기업은 결코 오래 가기 못할 것"이라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 이후 군산시와 전북도는 정부와 한국지엠 측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20여만명이 작성한 서명부를 전달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성명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광화문 범도민 켈기대회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새만금 내부철도 용역비 증액 부안, 철도도시 탈바꿈되나

### 국토부, 2억원 예산 투입 새만금 신항서 홍보관 연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긴급 발주... 결과는 11월 결정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새만금 신항~새만금 홍보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증액해 조사 용역을 긴급 발주함에 따라 지난 100년 이 넘는 동안 철도 교통의 오지였던 부안이 철도 도시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국회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제-부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 홍보관(부안군 변산면)을 연결하는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당초 1억원이었으나 해당 부처가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 것이다.

이는 오는 2023년 새만금 홍보관 일대에서 전 세계 169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에서 대회 장소까지 철도가 개통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강력한 요청과 정을 출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애정이 결합된 결과물로 풀이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이내 결정된다.

용역이 조기 발주되고 용역비가 추가 반영된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임을 예고하는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백재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황주홍 민주평화당 예산조정 소소위원 등 예산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 국회 단계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한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장관이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는 등 정부와 입법부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철도교통의 오지로 남아있던 부안이 철도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며 "지적에 공황과 신항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부안은 하늘길과 배길, 철도길이 모두 열리는 환황해권 교통의 중심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내달 청와대 조직개편**

청와대는 다음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직진단과 각 부서별 업무평가를 진행해 개편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월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된다"면서 "청와대는 청와대 내의 조직진단 및 각 부서의 업무평가를 진행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진단 및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3면	-문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산 유감"
6면	-당정,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증금저리 출시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